

# 통합까지 한걸음… 추진 배경부터 주요 쟁점 궁금증 해소

##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기까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통합 추진 배경부터 특별법을 들려싼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근교 시·군 주민 100여명과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최근 쟁점이 된 정부 부처의 특례 볼수 용 등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방송 생중계로 진행자의 질문과 방문객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정통합의 과정과 산업 및 지역의 변화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우선 강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이뤄지게 된 배경과 과정, 통합의 속도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많은 이들이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는지, 선거를 앞두고 굳이 왜 추진하는지 묻는다"면서 "30년간 3번 도전해서 실패한 통합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광주·전남을 떠나갔고 이런 절박함보다 통합의 추진 속도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속도감 있는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정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정부가 앞장서 나서고 있다"며 "통합을 이룰 적기이며, 이번에 반드시 통합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통합을 선언한 뒤 한 달하고

10일이 지났다. 설렘도, 기대도 컸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던"며 "시·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졌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다.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광주·전남 대부흥을 만들 어 과거 400만 도민이라 불리던 시절을 되살리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 강조하며, 과거부터 통합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을 나눌 이유가 없으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사실 전남에서 통합에 '통'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남도민은 통합이 되면 광주로 흡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먼저 꺼내기에는 주저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연말 지사님께서 통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

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통합에 대해 작년 가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통합 선언을 하면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공항 문제가 해결됐고, 대통령께서 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하겠다고 해 여기서 하나님으로 합치지 않으면 전부를 빼길 수 있다는 생각에 통합을 선언했다"고 통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님께 바로 화답을 해줬고, 그 뒤로는 일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죽이 잘 맞다 느끼며, 파트너로서 호흡이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 내 119건에 대해 정부 부처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양 시·도지사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강 시장은 "자치분권을 보장해라, 연방 정부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 봇물 터지듯 나오지만 중앙집권 체제를 비꾸려다 보니 손봐야 할 게 많아 특별법이 많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1차 목표는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을 뒀고, 여기에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었는데, 수많은 특례가 수용되지 않으니 큰 일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 8일 긴급히 지사님, 국회의원들과 자리를 갖고,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부처를 융단폭격했다"며 "어제는 국회 공청회를 끝내고 오후 9시 총리 공관에서 심야 회동까지 하며 요구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는 후문을 전했다.

강 시장은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해주는 재정 특례를 특별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의원 정수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자치구 보통교부세 등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안 해줄 일은 없겠지만 더 싸워서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본다"며 "전국에 거쳐 산업과 관련된 특례조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광주·전남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인식을 꾼집었다.

그는 "중앙부처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중앙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인식전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다"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과 삼성전자를 축으로 하는 전자 분야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강기정 시장 "전남 커져야 광주가 커져…통합 이를 적기"

##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은 하나…거스를 수 없는 흐름"

## 특별법안, 산업·일자리 확대 집중…특례 불수용 질타

핵심인 AI 특화단지는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준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종리님께 말씀드렸고, 절충안도 제시했다. 다른 나라처럼 중앙의 권한을 절반이라도 가져오도록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물고를 트겠고, 종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기준까지 만들었다. 광주·전남은 가장 먼 지역인데, 전국적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의 말씀과 명면으로 배치된다"며 "5년간 재정지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지원 액수가 중요하다. 이번 회에 확실히 특별법에 담아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통합 이후 산업의 재편도 중요하게 봤다. 산업의 판도를 뒤바꿔 기업이 광주와 전남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잘 갖춰진 AI 생태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의 요람이다"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과 삼성전자를 축으로 하는 전자 분야가

강점인데, 광주에서 실증을 하고 전 세계에 뿌려진다면 광주로 청년들이 몰릴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동부권 산단을 키워 반도체를 주력산업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보다 물과 전기, 풍부한 땅이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통합은 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을 기울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큰 틀에서 판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도시"라며 "취지를 앞으로도 살려 나가야 하며, 나주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행정통합이 됐을 경우 선도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 시장은 "전 세계 흐름이 남부권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추세"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3차)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광양은 이차전지, 여수는 LNG 하브, 서남권은 수소 등 기업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현대자동차는 수소 산업과 관련해 전남·전북에 이미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LG 쪽과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HD 현대와는 AI 조선소를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다"며 "만약 삼성까지 온다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합 후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AI·에너지·문화 수도 전남광주특별시'가 될 것으로 봤다.

강 시장은 'In 서울'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In 통합특별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 시·도지사는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광주·전남으로 올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